
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일상 회복 하에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2년 -

2021. 12. 22.



기획재정부



목 차



I. 4년반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6
III. 2022년 핵심 추진과제	8
1. 완전한 경제정상화 뒷받침	8
2.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	12
3. 포용적 성장기반 공고화	16
4. 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	21
5. 구조전환 및 미래변화 대비	24
IV. 2022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뀔니다	31
【붙임1】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	32

I.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

1 적극적인 코로나19 위기대응

□ 추진실적

① (재정역할강화) 6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위기에 신속 대응

- ('20년) 59년만의 연중 **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*** (총 76.2조원)을 통해 “적기에”, “신속하게”, “맞춤형 피해지원” 실시

* ①1차(3월): 코로나 초기확산 대응(11.7조원), ②2차(4월): 전국민 재난지원금(12.2조원), ③3차(6월) 한국판 뉴딜 등 역대 최대 규모(35.1조원), ④4차(9월): 피해계층 맞춤형(7.8조원), ⑤맞춤형 피해지원(12월 9.3조원)

- ('21년)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지원, 방역·고용 대응 등을 위한 **2차례 추경**(총 49.8조원)* 및 **확장적 본예산** 편성('22년 607.7조원, +8.9%)

* ①1차(3월) : 고용상황 악화 대응, 방역소요 보강 등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(14.9조원)

②2차(7월) :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, 방역·백신 보강, 고용·청년 대책 등(34.9조원)

② (긴급 금융지원) 소상공인·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“**175조원 + α 민생·금융안정 패키지**” 마련·시행

* (기업자금지원: 83조원) 소상공인·중소기업 경영자금 대출, 특례·전액보증 등 (금융시장안정화: 73조원) 코로나피해 P-CBO, 회사채·CP매입기구, 시장안정펀드 등 (기간산업안정기금: 40조원) 국민경제 영향이 큰 항공·해운 등 기간산업 지원

□ 정책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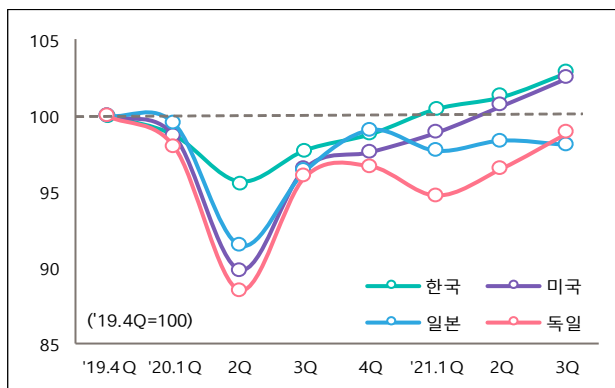
① (신속한 경제회복) 작년 역성장폭을 최소화($\Delta 0.9\%$, G20 중 3위)한 데 이어, 금년 들어서는 **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**를 지속

- 그 결과, 코로나 위기 및 회복 과정 전반의 성장세를 보여주는 '20~'21년 평균 성장률(1.5%)이 G20 선진국 중 가장 높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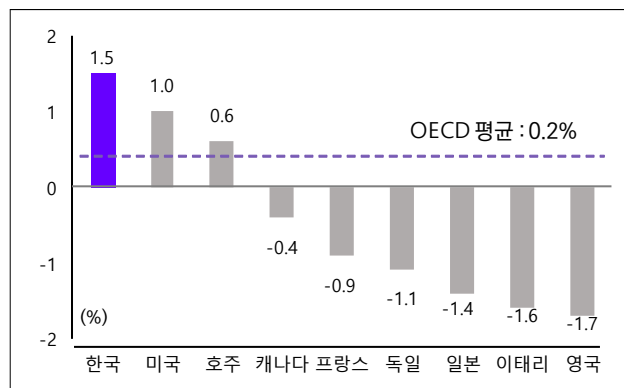
② (선진경제로 도약) '20년 경제규모 **글로벌 Top10** 진입('21년 유지), '21년 1인당 **국민소득(GNI) 3만 5천불** 수준 전망('17년 3만불 달성)

* 1인당 경상 GDP는 '20년 이탈리아(G7 국가) 추월

주요국 GDP 추이



'20~'21년 성장률 추이('21년 OECD 전망치)



2 대외부문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

□ 추진실적

- ① (시장안정노력) 코로나19 위기사 **韓美 통화스왑* 체결**, 외환건전성 제도 **완화**** 등을 통해 외환·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적·선제적 대응
 - * 600억불 규모, '20.3.31일부터 6차례에 걸쳐 198.72억불 공급, '20.7월 전액 상환
 - ** 선물환포지션 25% 상향, 외화LCR 완화(80→70%), 건전성부담금 6개월 한시 면제
- 과거 위기사 국내 외환부문 불안과 대외신인도 영향이 일부 있었으나, 금번 코로나 위기에는 대외부문이 안정을 유지하며 실물회복 지원
- ② (신인도제고) 해외투자자, 신용평가사 등과 우리경제 주요이슈에 대한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**대외신인도 유지**
 - * '19.10월(뉴욕), '21.11월(런던) 두 차례 부총리 대면 IR 및 '19년이후 3대 신평사와 8차례 연례협의 등을 통해 우리 경제회복 및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을 적극 설명
- ③ (국제정책공조) **G20 국제금융체제(IFA) 공동의장국**(韓·佛)으로서 팬데믹 충격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을 위한 정책공조 논의 선도

□ 정책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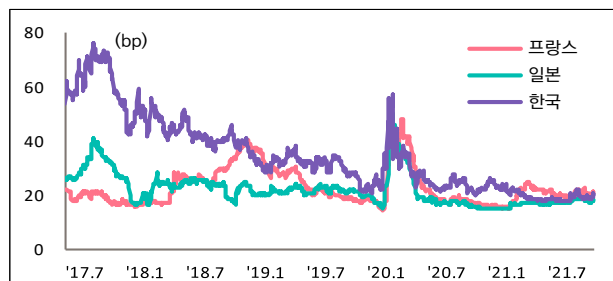
- ① (최고 신용등급) 역대 **최고수준(AA)**의 국가**신용등급** 유지
 - * 코로나19 이후 113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
 - ↳ **신흥국** 뿐 아니라 G7 등 주요 선진국 신용등급 및 전망도 하향조정
- ② (국가부도위험 최저) **국가 부도위험**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**최저수준**으로 유지 중
 - * '21.8월 최저치(17bp) 경신 이후 현재 17~20bp 수준
- ③ (외평채발행 성과) '20, '21년 **역대 최저 가산금리**로 **외평채를 발행**,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견고한 신뢰 확인 및 대외신인도 제고

- ▶ ('20. 9월) 달러화: 사상 최저 발행금리(1.198% = 美 국채 + 가산금리 50bp(역대최저))
유로화: 비유럽 최초 마이너스 금리 국채(△0.059%)
- ▶ ('21.10월) 달러화: 역대 두 번째 낮은 발행금리(1.769% = 美 국채 + 가산금리 25bp(역대최저))
유로화: 아시아 정부 최초 녹색채권, 2년 연속 마이너스 금리(△0.053%) 발행

코로나 이후 국가신용등급·전망

	국가신용등급(전망) 추이	비 고
美	AAA(안정적) → AAA(부정적)	Fitch (7.31일)
英	AA(부정적) → AA- (부정적)	Fitch (3.27일)
日	A(안정적) → A(부정적)	Fitch (7.28일)

CDS프리미엄 추이(bp)



3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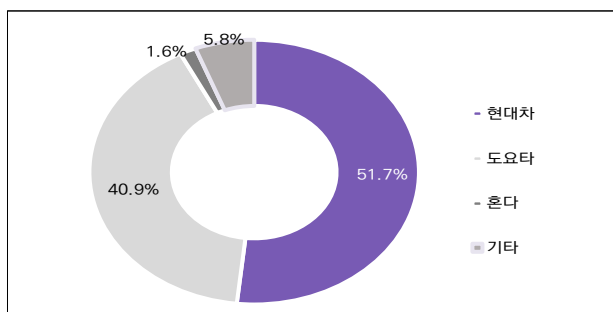
□ 추진실적

- ① (BIG3) '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('20.12월~)'를 설치,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육성·지원('22년 6.3조원 투자, 전년대비 +42.6%)
- ② (벤처·창업) K-유니콘 프로젝트*, 혁신모험펀드 조성(10조원), 벤처 활성화 제도 개선** 등 추진하여 제2벤처 붐 확산·가속화
 - * 유망 스타트업 200개 성장 지원(기업당 최대 159억원),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
 - **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(CVC) 제한적 보유 허용, 벤처확인제도 전면개편,
- ③ (한국판 뉴딜 2.0)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·사회 구조변화 선제대응을 통해 선도국가 도약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('20.7월)
 - 이후, '안전망 강화'를 '휴먼뉴딜'로 확대·개편하고,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, 탄소중립 등이 포함된 진화하는 뉴딜 2.0 발표*('21.7월)
 - * 디지털·그린·휴먼·지역균형 뉴딜(3+1) 추진, 법제도개혁 및 뉴딜펀드 조성, '20~'25년까지 총 투자규모를 160조원에서 220조원(국비 160조원)으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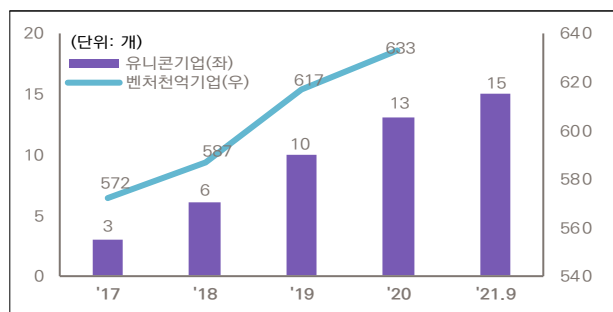
□ 정책효과

- ① (BIG3 주력산업화)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¹⁾, 바이오헬스 10대 수출품목 진입('20)²⁾, 반도체 설비투자 대폭 확대³⁾ 등 성과 창출
 - 1) 글로벌 시장점유율('21.상) : (현대차) 51.7% (도요타) 40.9% (혼다) 1.6%
 - 2) '20년 수출액 217억 달러 및 의약품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달성
 - 3) 한국 '22년 반도체 설비투자 전세계 1위 예상(300억불,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)
- ② (벤처·창업 활성화) '21.1~3분기 벤처투자*가 역대 최대인 '20년 연간 실적을 돌파하고, 기술창업·유니콘 기업 수(역대 최대)**도 증가 추세
 - * (벤처투자, 조원): ('17) 2.38 → ('18) 3.42 → ('19) 4.28 → ('20) 4.30 → ('21.1~3Q) 5.26
 - ** (기술창업, 만개): ('17) 19.9 → ('18) 21.2 → ('19) 22.1 → ('20) 22.9 → ('21.1~3Q) 18.1
(유니콘 기업 수, 개): ('17) 3 → ('18) 6 → ('19) 10 → ('20) 13 → ('21) 15개
- ③ (한국판뉴딜 성과) 데이터·인공지능 공급기업 증가 등 데이터산업 시장 성장*, 재생에너지 설비구축 목표** 초과달성 등 선도적 성과 창출
 - *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: ('17)14.4조원 → ('18)15.6조원 → ('19)16.8조원 → ('20)19.3조원
 - ** 재생에너지 보급(GW) : ('19) 목표 2.4 → 실적 4.5 / ('20) 목표 4.2 → 실적 5.3

수소차 글로벌 시장점유율('21.상반기)



유니콘 기업 및 벤처천억기업 수



4

포용성장 확산

□ 추진실적

- ① (일자리 양) 신산업 육성, 창업촉진 등을 통해 양질의 **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**을 **조성**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 등 추진

-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유지, 재정일자리 등 전방위적 지원

- ② (일자리 질) **임금**(최저임금 인상*), **근로시간**(주52시간제**)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, 비정규직 남용 방지, 차별 금지 등 비정규직 문제 개선

* 최저임금 인상률(%) : ('18) 16.4 ('19) 10.9 ('20) 2.87 ('21) 1.5 ('22) 5.05

** 300인 이상('18.7월), 50~299인('20.1월), 5~49인('21.7월) 사업장 단계적 도입

- ③ (고용안전망) 전국민 고용보험('20.12~),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 취업지원제도*('21.1) 도입 등으로 **중층적 고용안전망** 구축

* 취업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제공('21.11월말 기준 신청자수 48.6만명)

□ 정책효과

- ① (일자리 창출) 취업자수 등 **고용 양적지표가 꾸준히 개선***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실업을 **최소화***하고 위기 직전 수준 고용 회복

* 취업자수 증감(만명, 전년비) : ('16)23.1 ('17)31.6 ('18)9.7 ('19)30.1 ('20)△21.8 ('21.1~11)**33.2**

고용률(% , 15~64세) : ('16)66.1 ('17)66.6 ('18)66.6 ('19)66.8 ('20)65.9 ('21.1~11)**66.4**

경제활동참가율(%) : ('16)62.9 ('17)63.2 ('18)63.1 ('19)63.3 ('20)62.5 ('21.1~11)**62.8**

** '20년 실업률 상승폭(%p): **(한국) 0.2** (일본) 0.4 (독일) 0.6 (미국) 4.4

- ② (일자리 질 개선)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격차가 완화되고, 연간 근로시간이 지속 감소하는 등 **근로여건 개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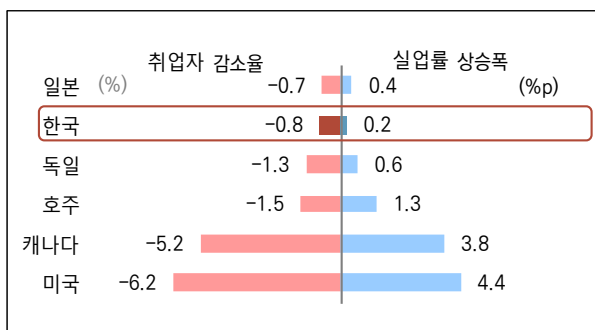
* 저임금근로자 비중(%) : ('16) **23.5** ('17) 22.3 ('18) 19.0 ('19) 17.0 ('20) **16.0**

** 연간 근로시간(시간): ('16) **2,033** ('17) 1,996 ('18) 1,967 ('19) 1,957 ('20) **1,927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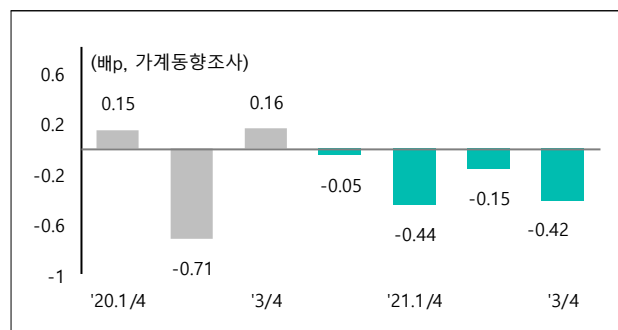
- ③ (분배 개선) **안전망 강화** 및 긴급지원 등 방역 위기에 대응한 정책 노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전('19년) 대비 **분배 상황 4분기 연속 개선**

* 5분위배율<증감폭>: ('20.4/4)5.78<△0.05> ('21.1/4)6.30<△0.44> (2/4)5.59<△0.15> (3/4)5.34<△0.42>

주요국 '20년 취업자, 실업자 증감률



위기 이전('19년) 대비 5분위배율 증감



5

소재·부품·장비 공급안정 및 자립화 대책

□ 추진실적

◇ 일본 수출규제('19.7) 및 코로나 위기 이후 글로벌 공급망 약화 등에 대응하여 **핵심 소재·부품·장비*** 공급 안정화 추진

* 소부장은 주력 제조업(반도체, 자동차, 조선 등) 뿐만 아니라 신산업(미래차, 시스템 반도체, 바이오헬스 산업) 등 산업 전반의 생산 공정에 매우 필수적인 품목

① (소부장 3중세트 마련) 소부장 자립화를 영구적·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인 '**소부장 3중세트**' 마련

- ▶ (소부장 특별법) 전략기술 확보, 특화단지 지정, 으뜸기업 육성 등 지원 법적근거 마련
- ▶ (소부장 특별회계) 소부장 투자규모를 **2배 이상 확대**(19년 1.1 → 21년 2.6조원)
- ▶ (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) 소부장 정책을 총괄하는 **민관합동 기구**로 신설('19.10월) → 이후 8차례 회의 개최, 총 47건의 안건 논의 + 주요 정책 이행상황 지속 점검

② (공급안정화) 45건의 협력모델 사업* 모델 발굴·지원, 공급망 다변화·M&A 등을 통해 **338대 품목**(첨단형 158, 범용형 180개)의 안정적 공급 추진

* 「소재부품장비 특별법」 제49~50조: 수요-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·자금·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

** (수입다변화) 대체처 발굴 및 수요기업 생산라인을 활용한 대체품 적합성 테스트 (재고확충) 보세구역 반출기간 연장(15일→필요기간), 보세운송 임시제공·검사생략 등 (신증설투자) 공장 신증설 인허가 절차 fast-track / (M&A) 핵심전략품목 국내외M&A 유동성 지원

□ 정책효과

① (공급안정화) 소부장 **3대 핵심품목*** 공급안정화 및 생산차질 **全無**, **100대 품목 대일의존도 감소**(('19.1~10월) 31.4% → ('21.1~10월) 25.1%)

* ①(불화수소) 대일수입액 1/6수준으로 감소, ②(불화폴리이미드) 대체소재 사용으로 대일 수입 사실상 無, ③(EUV 레지스트) 대일의존도 절반 이하로 감소

** 소부장 전체품목 대일의존도 : ('19.1~10월) 17.1% → ('21.1~10월) 15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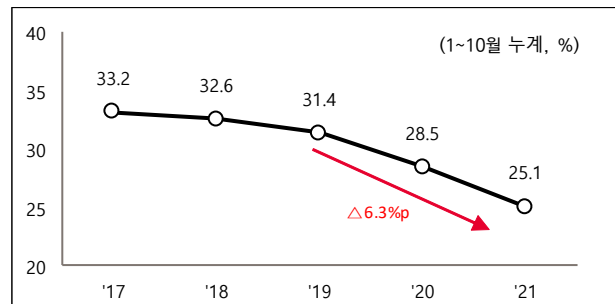
② (산업생태계) **소부장 상장기업** 총매출액은 '21.상반기에 '19년대비 **15.7% 증가**하여 **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(9.8%) 크게 상회**

*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도 기존 13개에서 34개로 크게 증가

3대 품목 공급망 안정

불화수소	불화폴리이미드	EUV레지스트
· 국내 생산 솔브레인 생산 2배 확대	· 대체소재 채택 Ultra Thin Glass	· 수입다변화 벨기에산 수입 12배 확대
→ 對日수입액 1/6로 감소	→ 對日수입 사실상 0	→ 對日의존도 50% 이하

100대 핵심품목 수입의존도



II.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추진 여건

□ (경기)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, 코로나 확산세가 불확실성으로 작용

- ① (내수) 국내외 경기 개선에 따른 그간의 고용·소득증가 등이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

* 취업자수 증감(만명) : ('19) 30 → ('20) △22 → ('21^e) 35 → ('22^e) 28

- ② (수출) 양호한 글로벌 경기·교역 여건 하에 증가세 유지 전망
<다만, 금년 가파른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증가율은 둔화>

* 수출증가율(%) : ('21.1/4)12.5 (2/4)42.1 (3/4)26.5 (10)24.1 (11)32.1, **(12.1~20)20.0**

⇒ 방역상황 안정에 최선을 다하면서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강한 경기개선을 이루어 내도록 정책 역량을 결집

□ (민생)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지나, 물가 상방압력 지속 예상

- ① (고용) 서비스업 업황 회복,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, 취약계층 고용 어려움 지속될 가능성

* 일자리 예산(조원, 본예산 기준) : ('21) 30.1 → ('22) **31.1** <전년대비 +1.0조원>

- ② (물가) 국제유가 오름세 둔화,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

- 다만,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방압력 확대,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가공식품·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 지속 예상

⇒ 취약계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면서,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품목별 맞춤형 관리와 함께 구조적 대응 노력 강화

□ (리스크)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 확대 예상

- ① (대내) 생산가능인구 감소, 디지털·저탄소 경제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본격화, 위기 회복과정에서의 신양극화 심화 등

- ② (글로벌) 오미크론 확산,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,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경기·물가·자본유출입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

⇒ 경제·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,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도 선제·밀착 관리

목표

일상 회복 하에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2년

4+1
정책
방향

완전한 경제정상화 뒷받침

-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
- 부문별(소비·투자·수출) 활력제고
- 일자리 유지·창출 지원강화
- 글로벌 경제협력·진출 확대

혁신성장 성과 고도화

- 한국판 뉴딜 성과 극대화
- BIG3 등 신산업 성장동력 강화
- 주력산업·서비스산업 혁신
-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 강화

포용적 성장기반 공고화

- 소상공인·취약업종 피해지원
- 고용·사회안전망 강화
- 新양극화 완화
- 사회적경제·협동조합 활성화

대내외 리스크 안정적 관리

-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
- 대외이슈 및 공급망 변화 대응
- 부동산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



구조전환 및 미래변화 대비

-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
-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과 재정관리체계 혁신
- 인구감소·지방소멸 대응
- 국고관리 및 공공기관 혁신

추진
전략

-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, 위험요인 등에 선제적 대응
- 핵심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국회 및 부처와 협업(범부처 TF 등)을 강화하고, 국민·기업 등 경제주체와의 소통을 활성화

Ⅲ. 2022년 핵심 추진과제

1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.

- ◇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기반으로 소비·투자·수출의 고른 증가 및 일자리 확대를 견인하여 완전한 경제정상궤도로 도약하겠습니다.

(1) 경제정상화를 위한 최적 거시금융 정책조합(Policy Mix) 운용

① [재정기조] 코로나 완전 극복,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 기조 유지

- 총지출 증가율(8.9%)이 경상성장률(4.6%)을 상회하는 확장기조*를 유지하여 확장재정→경제회복→세수증대→건전재정의 '선순환 구조' 실현

* 경상성장률-총지출 격차(%p): ('18)△2.6, ('19)△5.1, ('20)△5.3, ('21)△2.7, ('22)△4.3

조원(%)	'21년		'22년
	본예산	2회 추경	
◇ 총 수 입(증가율)	482.6(0.2)	514.6(6.8)	553.6(7.6*)
◇ 총 지 출(증가율)	558.0(8.9)	604.9(18.1)	607.7(8.9)
■ 통합재정수지(GDP 대비)	△75.4(△3.7)	△90.3(△4.4)	△54.1(△2.5)
■ 국가채무(GDP 대비)	956.0(47.3)	965.3(47.3)	1,064.4(50.0)

* '22년 총수입 증가율은 '21년 2회 추경 대비

② [집행관리] 적극적 재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·점검관리 철저

-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 사업을 중심으로 월별 집행 점검·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반기 조기집행* 노력 경주

* 상반기 집행목표(%) : ('17) 58.0 ('18) 58.0 ('19) 61.0 ('20) 62.0 ('21) 63.0 ('22) 63.0

- 지방·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하여 적극적 기조를 견지하고, 추경 편성을 독려하는 등 확장적 운용에 최선을

* 상반기 집행목표(%), '21→'22년 : (지자체) 60.0→60.5 (지방교육) 63.5→64.0

③ [금융정책] 한시 지원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

- 코로나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프로그램을 조정(34.3 → 7.0조원)하되, 정책금융 총액은 '21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

* 정책금융(조원): ('18) 408.6 ('19) 435.5 ('20) 478.8 ('21) 494.8 ('22) 495.0

↳ 산은, 기은, 수은, 중진공, 신보, 무보, 지신보, 기보 등

- '22.3월 이후 만기연장·상한유예 정상화시 연착륙 가능하도록 보완·지원 조치, 코로나로 인한 외환건전성 완화조치*도 정상화 검토

* 선물환포지션 (국내)40→50%, (외은)200→250% / 외화LCR(~'22.3월) 80→70%

(2) 소비, 투자, 수출 부문의 고른 증가로 경제회복을 견인

① [소비] 소비 불업을 위한 소비 진작 패키지 추진

- 소비쿠폰 중 이월가능한 잔여예산*을 활용하여 주요 피해분야 소비 지원에 지속 활용하고,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**조치 '22.6월까지 연장
 - * '21→'22년 이월 예상 쿠폰: 숙박, 실내체육시설, 프로스포츠 총 3종 / 약 400억원 규모
 - **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5.0 → 3.5%로 인하(100만원 한도)
- 추가소비 특별공제* 제도를 1년간 연장·확대하고,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'상생소비더하기**' 제도 도입
 - * '21년대비 5%이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+ 전통시장 추가소비분에 대한 10% 추가 공제 신설
 - ** 동행세일 기간(5월) 전·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/ 소상공인 등 대상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시 추첨번호 임의부여→익월 추첨 후 당첨금 지급
- '22년 상반기(방역상황에 따라 조정) 중 교통수단·유원시설 등 할인을 국내여행과 집중 연계하는 '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(가칭)' 운영
 - * 철도(KTX + 관광지 입장권 결합), 고속버스(기간별 프리패스 이용권 할인) 등

② [투자] 115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및 민간투자 세제혜택 확대

-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투자·민자사업·공공기관 3대 분야 115조원 투자프로젝트의 적기 착공·집행을 집중 지원
 - * (기업투자) 제도 개선, 행정절차 신속 지원 등을 통해 33.0조원 프로젝트 지원 (민자사업) 신규 민자사업 11.0조원 발굴 및 4.5조원 규모 집행계획 이행 (공공기관) '22년 공공기관 투자목표 67조원 신속한 집행(상반기 52.6%) 추진
-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R&D·시설투자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'국가전략기술' 신규 운영 및 탄소중립 분야 R&D 세제혜택** 신설
 - * 대중소 최대 30%→40%, 중소 최대 40%→50% 등 세액공제율 대폭 확대
 - **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 세제혜택 대상 12대 분야에 탄소중립 분야 추가

③ [수출] 견조한 수출회복세 지속을 위한 금융 및 판로 확대 지원

- 핵심전략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7조원 규모 우대지원 프로그램, 전·후방 투자펀드 신규조성 등 산업별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
-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유망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('22년 1,000개社)하고,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지원
 - * 수출바우처를 통한 컨설팅·통번역·마케팅 등 메뉴판식 지원 제공(4,898개社)

[3] 일자리 유지·창출 지원 강화

① [고용여력 보강] 코로나19 피해집중 업종의 고용여력 최대한 보강

- 고용유지지원금을 '22년에도 지속 지원하여,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(0.6조원 지원, 약 16.4만명 대상)
 - * (지원내용) (유급) 휴업·휴직수당의 최대 66%(특별고용지원업종 90%) (무급) 평균임금의 50%
- 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, 저임금노동자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(0.4조원)을 6개월간 한시 연장

② [취약계층 지원] 청년·여성·장애인 등 조속한 고용시장 복귀 지원

- (청년) 일자리도약장려금* 신설 등 청년채용 인센티브 강화 및 K-Digital Training(1.7→2.9만명)·Credit(4→5.5만명) 등 인재양성 확대
 - *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年 최대 960만원 지원(14만명)
- (여성)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*하고 새 일센터 여성인턴(8천명) 지원 및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 - * 중소·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인건비의 15~30% 세액공제
↳ 경력단절기간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→ 2년 이상으로 완화
- (장애인)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.6%로 0.2%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 고용장려금 지급*(22년 3천명)
 - *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시 지급
- (고령층)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당 30만원 신규 지급(22년 6천명 대상)

③ [일자리 창출]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상생형 일자리 신규 발굴

- 직접 일자리는 106만개로 확대(22 3.3조원)하여 연초에 조기채용토록 하고, 사회서비스형, 민간제안, 지자체 등 현장수요 중심으로 내실화
 - * (노인) 84.5만개, (장애인) 2.8만개, (저소득층) 6.6만개, (청년) 2.7만개, (여성) 0.8만개 등
- 광주 상생형 일자리 성과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·집행하는 '지역주도형 지원사업' 신설(22년 40억)
 - 사전컨설팅-선정-이행지원 등 쏙주기별 패키지 지원 병행
 - * (既선정 지역) 광주(20.6월), 강원·밀양(20.10월), 군산·부산(21.2월)

(4) 글로벌 경제협력·진출 확대 및 대외신인도 관리

① [해외진출] FTA 네트워크 확대 및 해외수주 지원을 강화

- '22년 발효예정인 RCEP 사전준비 및 CPTPP 가입추진 등을 통한 메가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신남방·중남미·중동으로의 FTA 확장*
 - * 한-캄보디아 FTA 발효,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협상 진전, 멕시코('08년 이후 중단)· 걸프협력이사회('10년 이후 중단)와 FTA 협상 재개 추진 등
- 해외 인프라사업 대상 금융지원 강화*, 고부가 투자개발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인프라 공기업의 예타·인사 관련 제도개선** 이행
 - * 수은 특별계정 적극 활용, 기본여신약정 확대(사우디·카타르 등 대상기관 확대) 등
 - ** (예타) MDB 참여사업 등 예타평가지 우대, 신속예타제도 실효성 제고, 예비협의 신설 등 (인사) 해외사업 전문직위 신설 및 장기계약 수주시 참여인력 정원 반영

② [경제협력] 주요 국가와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 공고화 추진

- 한미 정상회담 합의('21.5월)에 기반하여 반도체·배터리·의약품 등 핵심분야 공동투자 및 공동연구개발 확대 등 협력 강화
- 한·중 수교 30주년 계기 문화협력 활성화, 한·중 경제장관회의('22.1월, 잠정) 등을 통해 공급망, 투자자/지재권 보호 등 분야 경제협력 기반 강화
- 신북방·신남방 고위급 경험 채널(한-러 경제공동위, 한-우즈벡·한-베 부총리회의) 등 통해 인프라·산업단지 등 주요 분야 협력 고도화
 - * (러시아) 연해주 산단 등 9개다리(9-bridge) 행동계획 2.0 진전 가속화 (베트남) '22년 수교 30주년 계기 호치민 메트로 건설, 한-베 산업단지 등 중점 논의
-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에 따른 국내 경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, 디지털세, 디지털 규범 등 신규 추진되는 제도에도 적극 대응

③ [대외신인도] 해외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외환거래 체계 개편

- 신용평가사 연례협의*,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한국경제를 상시 홍보하고,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
 - * ('22.上) 무디스 연례협의 및 3사 국가신용등급 발표(잠정), (下) S&P·피치 연례협의(잠정)
- 외환거래 참가자·규모 확대, 거래방식 고도화 등에 대응하여 외환거래체계를 전면 개편하고,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

2

혁신성장의 성과를 고도화하겠습니다.

- ◇ **한국판 뉴딜 성과 극대화**와 함께, **BIG3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화**, **주력산업·서비스산업 혁신** 등으로 **선도형 경제**로 도약하겠습니다.

(1) 한국판 뉴딜 2.0 성과 극대화

① (재정투자) 진화하는 뉴딜, **한국판 뉴딜 2.0에 33.1조원 투자**

- '22년 한국판 뉴딜 예산이 대폭 확대된 33.1조원*으로 확정 → 한국판 뉴딜 2.0 추진계획('21.7월)에 따라 '22년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
- * '21본예산 대비 +12.1조, 디지털뉴딜(9.0조) + 그린뉴딜(12.7조) + 휴먼뉴딜(11.4조)
- 뉴딜 2.0 신규과제(초연결 신산업, 탄소중립기반조성)을 신속히 안착시키고, 불평등·격차해소 등을 위해 확대 개편된 휴먼 뉴딜 본격 추진

② (법제도) 뉴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**제도개선 및 입법과제 마무리**

- 한국판 뉴딜 2.0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'21년까지 발굴한 191개 법·제도개선 과제*에 대해 추진상황 점검·개선 추진
- * (예)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 허용, 통신수단 보험 계약해지 허용, 원격교육법 하위법령 제정,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,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, RE100 이행 에너지원 확대 등
-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 뉴딜사업을 가로막는 제도개선 과제를 경제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, 현장애로는 신속 해소
-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12대 분야 43개 법률 제·개정 마무리
- * 입법 중 : 기업활력특별법, 노동전환지원법, 녹색금융촉진특별법 등 16개 법안

③ (민간확산) **뉴딜펀드 신규조성 및 혁신조달 확대 등 민간확산 추진**

- 국민과의 투자성과 공유를 위한 '국민참여 뉴딜펀드' 추가 조성을 추진하고 뉴딜 '인프라*'의 범위를 확대하여 활발한 펀드조성 촉진
- * 인공지능,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 도입
- 한국판뉴딜 혁신제품 지정트랙을 확대하고, 혁신구매목표제를 '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여 뉴딜 혁신제품 판로 마련
- 범부처 뉴딜 성과보고대회('22.3월)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·홍보노력*과 함께 국제행사 계기 뉴딜2.0 글로벌 확산도 추진
- * 뉴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운영, 주요사업 계획 보도(매월), 공모사업 공고(수시) 등

(2) BIG3 등 신성장동력 육성 강화

① [BIG3]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정·세제 등 지원

- BIG3 분야에 전년대비 43% 증가한 6.3조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, BIG3 분야 R&D·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10%p 확대

* BIG3 재정투자(조원) : ('19) 2.2, ('20) 3.2, ('21) 4.4, ('22) **6.3**

** 국가전략기술(반도체, 배터리, 백신분야) 세액공제(%) : (R&D) 30~50 (시설투자) 6~16

- 인허가·기반시설 등 패키지형 지원, 수요맞춤 인재공급, 신속한 규제개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 법·제도기반 구축

*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 중

② [신산업] 디지털 신기술·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역량 집중

- 메타버스·클라우드·블록체인 등 성장잠재력과 시장수요가 큰 유망 신산업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

- 범부처 「신산업 전략지원 TF」*('21.4.9~)를 통해 마련한 5대 분야**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 추진

* 기재부 1차관(팀장) + 과기부·산업부·복지부·문체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

** ❶ 클라우드, ❷ 블록체인, ❸ 지능형 로봇, ❹ 디지털 헬스케어, ❺ 메타버스

③ [벤처창업] 제2의 벤처붐 지속을 위한 지원 확대, 법·제도 마련

- 비대면·BIG3·그린뉴딜 등 유망 분야 창업을 지원*하고,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시행**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 개정('22.6월)

* ('21) 0.1 → ('22) 0.2조원 / 비대면(300개), BIG3(350개), 그린뉴딜(100개)

** (기존) 제조 창업기업 위주 부담금 면제 → (개선)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추가

-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('21.12월 시행),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(국회계류) 등 신규 제도에 대한 시장 안착을 준비

-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아세안(인도네시아, 베트남)에 프로그램형 K-스타트업 센터*를 시범·운영하고, '22년 글로벌 투자펀드 2,700억원 조성

* 국내 창업기업의 현지 안착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보육, 비즈니스 매칭, 창업사업화 자금, 창업 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

[3] 주력산업·서비스산업 혁신

① [주력산업] 주력산업 혁신 및 소재·부품·장비 공급 안정화

- 업종별 발전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주력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고 경쟁국과의 초격차 확보 노력 지속 추진
 - ① (K-반도체 전략, '21.5) K-반도체 벨트 조성, 세제·금융·규제 등 인프라 지원확대
 - ② (K-배터리 발전전략, '21.7)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R&D 추진, 수요기반 확대 등
 - ③ (K-조선 재도약전략, '21.9) 인력수급 등 생산역량 확보, 친환경·디지털 전환 지원 등
- 소부장 정책 추진 4년차를 맞아 '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산업으로의 도약'을 목표로 가시적 성과창출에 총력
 - 65개 미래선도품목* 선정·육성 및 핵심기술 R&D 투자를 확대하고 소부장 스타트업-강소기업-오픈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강화
 - * 반도체 등 주력산업 분야 27개 품목 +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38개 품목
 - 용인(반도체)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*를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
 - * 경기용인(반도체), 충북청주(이차전지), 충남천안(디스플레이), 전북전주(탄소소재), 경남창원(첨단기계)

② [서비스혁신]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 모멘텀 마련

-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('21.6~)의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3기 TF 구성('22.2분기), 혁신 가속화로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 모멘텀 마련
 - ICT 신기술 활용 확대 등으로 서비스업 전반 생산력을 제고,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新 비즈니스 모델 창출* 기회로 활용
 - * (예)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, 고령친화산업, 해양치유산업 등
 - 콘텐츠·물류 등 유망서비스는 고부가가치화로, 음식·숙박 등 생활밀착형서비스는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-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도약을 위한 체계적·장기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인 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」의 조속한 입법 추진
 - * 주요내용: ①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정책 및 계획 심의
②5년 단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
③R&D·인력 등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
- 서발법 입법에 대비, 시행령 등 후속조치 사전준비에도 만전

[4]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 강화

① [혁신인재 양성] 구조전환, 기술경쟁 심화 등 **인재수요에 적극 대응**

- 디지털, 산업기술, 미래원천기술, 환경·바이오 등 20대 신기술 분야에서 '21년보다 4.5만명 늘어난 15.8만명의 혁신인재 양성

신기술(분야)	주요 분야	'21년	'22년
① 디지털 (8개)	AI, 클라우드, 빅데이터	8.1만명	11.5만명
② 산업기술 (6개)	로봇·드론, 시스템반도체	1.4만명	2.3만명
③ 미래원천기술 (3개)	수소, 양자, 우주	0.1만명	0.15만명
④ 환경·바이오 (3개)	바이오헬스, 신재생에너지	1.7만명	1.9만명
계 (20개)		11.3만명	15.8만명

② [규제혁신] 모빌리티 등 **규제샌드박스 확대 및 현장소통 강화**

- 규제샌드박스 분야확대*, 신산업 핵심규제 정비, 中企·벤처기업 규제부담 완화 등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발굴·개선 지속
 - * ①산업융합, ②혁신금융, ③ICT융합, ④규제자유특구, ⑤스마트도시, ⑥연구개발특구 + ⑦모빌리티, ⑧바이오헬스
- 부총리-경제5단체장 정례간담회(매분기), 경제단체 실무협의체,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장소통 추진

③ [한걸음모델] 성과분석 및 **신규 과제 발굴** 등을 지속 추진

- '20년 이후 한걸음모델로 수행한 5개 과제*의 성과를 분석하여 인력·조직 등 전반적 측면에서 한걸음모델 개선 방안을 도출
 - * ('20년 과제) ①농어촌 빈집 숙박, ②도심 공유 숙박, ③하동 알프스 프로젝트
('21년 과제) ①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②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
 - 분석결과를 토대로 ①상생조정기구 등 모델 운영절차·내용 명문화, ②보조적 재정지원 등을 위한 법·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
- 규제 샌드박스 보류·거부 과제 등 신·구 사업자간 갈등이 존재하는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,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촉진하여 상생방안 마련

3

포용적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.

◇ 코로나19로 인한 **소상공인 피해지원**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**신앙극화**를 **완화**하고 **사회·고용안전망**을 **두텁게 확충**하겠습니다.

(1) 소상공인·취약업종 피해지원

① [손실보상 등] 차질없는 **소상공인 손실보상** 및 **방역지원금** 등 지급 추진

- '21년 4분기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손실보상 법령에 따라 차질없이 보상('22년 예산 등 3.2조원)
 - 손실보상 하한액을 10→50만원(분기당)으로 5배 인상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('21.4/4분기 손실보상금부터)
 -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 외에 '인원·시설 이용제한 조치'의 대상인 12만 곳을 손실보상 적용대상으로 확대
-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3.2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*을 '21.12월부터 지급 개시
 - * 매출감소 소상공인 320만명 = 손실보상 대상 90만명 + 비대상업종 중 매출감소 230만명
 -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 114.5만명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현물을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원(총 0.1조원 규모)

② [부담경감] 임대료·제세공과금 등 **비용부담 경감**에도 만전

-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·정부·공공기관 등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연장하고, 제세·공과금 지원도 신설·연장
 - *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(폐업 소상공인 등 포함) 및 기한연장('21.12→'22.12월)
국유재산·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지원을 6개월 추가 연장(~'22.6월)
 - ** 전기료(50%)·산재보험료(30%) 2개월('21.12~'22.1) 감면,
인원·시설제한 업종 소규모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('21.5월말)
-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으로 최저 1.0%의 총 35.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여,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 추진
 - 금융권*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도 지속(~'22.3월)
 - * 시중은행, 정책금융기관, 제2금융권, 중진·소진기금 등 대출·보증 대상

3 [재도약 지원] '폐업·재기-창업-성장' 단계별 지원 확대

- (폐업·재기)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스톱 폐업 지원 및 재도전자금 지원 확대('22년 0.1조원)
* 원스톱 폐업지원: ('21)6,500→('22)1만명 / 재도전자금: ('21)900→('22)1,400명
- (창업) 新사업 창업(500명, 최대 2천만원), 청년 아이디어 사업화(100명, 1천만원), 강한 소상공인 육성(최대 1억원) 등 창업 경쟁력 강화 지원('22년 0.02조원)
- (성장)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해 온라인 판로 진출 및 스마트화 지원도 강화('22년 0.2조원)
* 온라인 판로진출: ('21)5.3→('22)6만명 / 스마트상점·공방 보급: ('21)3,600→('22)6,600개

4 [매출 회복] 지역상권 매출·온기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책 시행

- 지역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·온누리상품권 18.5조원* 발행을 지원하고, 동행세일 기간 전후 대규모 추첨행사** 한시 도입
* 상품권 발행지원: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, 온누리상품권 3.5조원
** 상생소비더하기+: 동행세일 기간 전후('22.4~6월) 소비에 대해 추첨 방식의 지원제도 한시 도입
- 소비진작을 위해 동행세일을 조기에 개최('22.5월초 개최 추진)하고, 코리아세일페스타(11.1~15일) 등 대규모 소비행사 사전준비에 만전
* 동행세일 개최시기 : ('20) 6.26~7.12일 → ('21) 6.24~7.11일 → ('22) 5월초
- 찾아가는 현장 라이브커머스(20회 이상) 등을 통해 매출회복 도모

5 [취약 업종] 관광·항공업 등 취약업종 피해회복 위한 다각적 지원

-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기금 융자지원 규모를 550억원 확대*하여 지원하고, 호텔등급평가 유예 연장**(~'22.6월)
* 담보능력 없는 영세업체 대상 '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확대(500→1,000억원) 등
** (기존) '21.12월까지 → (연장) '22.6월까지
-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'22.6월까지 연장하고, ①유동성, ②고용지원, ③사용료·임대료 감면 등 다각적 지원 추진
*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'22.6월까지 연장
현재 착륙료(10~20%), 정류료(전액), 계류장사용료(전액) 등 감면 중
- 체육·문화시설, 택시·버스업계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금융·인력·방역물품,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
* 인원·시설·제한업종(결혼·장례식장, 일부 실내외 체육시설 등), 관광·공연·전시업종 등

[2] 고용·사회안전망 강화

① [고용보험 확대]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 추진

- 특고·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을 추가 확대('22.7월~)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에 대한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
 - * 예술인('20.12월~), 특고 12개 직종('21.7월~) 既적용,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('22.1월~) 적용
-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(KDI) 연구 용역에 착수('22.1월~)하고, 경사노위 내 연구회 운영 등 지속 추진
- 청년 중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를 확대(59→60만명)하고 시행 첫해('21년)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

② [보장성 강화] 기초생활·생계급여 등 보장성강화 추진

-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 기초생활보호급여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'21.10월)로 지원대상 확대(+5.3만가구)
 - * 기준중위소득 증가율(%): ('18) 1.16 ('19) 2.09 ('20) 2.94 ('21) 2.68 ('22) 5.02
-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이 개별가구로 분리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(기초생활보장 지침 개정, '22)
-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·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워져도 치료에 집중하여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* 시행('22년~)
 - * '22년부터 6개 시범지역 대상, 일 43,960원('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) 수준으로 지원

③ [사회안전망] 의료·주거·교육 등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강화

-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,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확대*하는 한편, 취약계층에 대해 두터워진** 재난적 의료비 지속 지원
 - * 치아 신경치료, 무치아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 등
 - ** (당초) 50% 지원, 2천만원 한도 → (개선, '21.11~) 소득수준에 따라 50~80%, 3천만원 한도
-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고(기준중위소득 45→46%),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('18~'22년 총 100만호 수준)
- 교육급여 수급 초·중·고생 대상 학습특별바우처를 신규 지급(年10만원)하고, 영재키움 프로젝트(512→600명) 등 저소득층 학습지원 확대

[3] 新양극화 완화

1 [청년] 생계부담 완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강화

- 소득구간별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*를 본격 시행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월 최대 20만원) 및 무이자 월세대출 지원

* 청년내일저축계좌(연소득 2,400만원 이하), 청년희망적금(연소득 3,600만원 이하),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(연소득 5,000만원 이하)

-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 의무상환액 체납 시 발생하는 연체금 한도 및 가산금 요율 하향 조정

* [연체 한도 (현행) 고지금액의 9% → (개선) 5% / [가산금 (현행) 매월(월할) 1.2% → 매일(일할) 0.01%

2 [여성] 친가족 정책 추진과 재취업 지원 강화

- 여성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친가족 5대 패키지*를 본격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(30인 이상 → 전사업장)

* ①부부 육아휴직 활성화(3+3 부부공동 육아휴직제 등), ②영아수당 도입(월30만원), ③첫 만남 이용권 지급(200만원), ④공보육 확충(국공립 어린이집 +550개소), ⑤다자녀 지원 확대(셋째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)

- 경력 단절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위해 폴리텍 여성 재취업훈련을 강화하고 새일센터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 확대

3 [장애인] 돌봄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

-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(월100→125시간)하고, 중위 120% 초과 가구도 중증장애아 돌봄 신규 지원*

* (현행) 중위 120% 이하 가구 지원(자부담 無) → (개선) 중위 120% 초과 가구도 지원(자부담 40%)

-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채용 시 지원하는 신규고용장려금 신설(최대 월 80만원, 3천명)

*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지급

4 [아동] 보육 체계 개편 및 지원 서비스의 질과 양 대폭 개선

-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신설(1천명)하고 생계급여 수급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(월 10→20만원)

-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호종료 아동 지원 확대*를 위한 전담기관 신설

* 자립수당(30만원) 지원기간 확대(3→5년),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비율 상향(1:1→1:2)

[4]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

① [사회적경제 기반구축] 법제도 기반구축 및 대국민 인식저변 확대

- 사회적경제의 법·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「사회적경제기본법」, 「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」 제정 추진
- 사회적경제 박람회('22.7월)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·가치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기업 교류의 장 마련

② [생태계 지원]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인재·금융·판로 지원

- 지속적인 전문인재 유입을 위해 선도대학 취·창업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, 선도대학 협의회 등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* 확장
 - * 예: 선도대학협의회와 사회적경제대학협의회간 포럼, 정례연구회 등 연계활동 추진
-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DB* 확충, 간이평가모형** 개발을 추진하고, 지역별 중개기관 발굴 등 비수도권 지원 강화
 - * 신용정보원에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DB 구축('21.6월 기준 26천개기업)
 - **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창업초기·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금융평가모형
- 온라인 판로지원 통합플랫폼(e-store 36.5)의 입점기업·품목을 확대하고, 홈쇼핑 등 온라인·비대면 유통채널 확대 추진
-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확대를 위해 성장지원센터와 혁신타운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지역 클러스터 조성방안 구체화

③ [협동조합 지원] 기본계획 수립 및 인프라 개선 추진

-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* 및 편의성** 제고를 위한 “협동조합기본법” 개정 추진('21.12월 현재 소위 계류중)
 - * 조합원의 총회소집청구권·의안제안권, 이사·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권 신설 등
 - ** 코로나19 등 재난시 서면의결·서면총회 허용, 변경신고 대상 축소
- 제5차 협동조합 실태조사(~'22.2) 및 지난 10년간의 종합적 평가('22.2~10)를 바탕으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('23~'25, '22.12월) 수립
- 국제비교 가능한 협동조합 통계 개발* 등 국제협력 강화 및 노후화된 통합정보시스템('13년 구축) 재구축['22년 5억원)
 - * ILO : 터키, 한국 등 5개 국가 대상 통계가이드라인 pilot-test 중('21년~'23년)

4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◇ 민생물가 상승,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·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(1)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

1 [생활물가] 수급관리,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

- 밥상물가와 밀접한 쌀,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관리를 강화하고,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 - * 계란은 공판장을 2개소 개설하여 경매를 통해 시장가격 형성·공표 예정 추진
-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편승한 물가인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가공식품 업계와의 소통 및 담합인상 등에 대한 단속 강화
- 유류세 인하효과 최대한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독려, 민관합동 시장점점반 가동, 오픈넷을 통한 가격 안내 등 시행

2 [공공요금·원자재] 제도개선을 통한 업계 부담완화 지속 추진

- 원가를 고려하되,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비용절감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
 - '22년 지방공공요금 동결 노력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균특회계 평가요소 반영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
- 원자재 수급상황에 따라 조달청 비철금속 비축물량 방출량을 확대하고, 비축물량 할인방출시 중소기업에게 우선 판매 추진
-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년 연장('21→'23년말) 하고, 가격·수급불안 대비 주요 곡물 비축물량 확대 추진

3 [물가 부처책임제] 범정부 물가대응체계 강화

- 부처별로 소관분야* 가격·수급을 모니터링하고, 소관부처 책임 하에 단기 수급관리 및 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부처책임제 시행
 - * 예: (농식품부) 농축산물·가공식품·외식, (산업부) 석유류, 내구재 등 공업제품 등 / (기재부) 총괄TF 운영
 - 물가관계차관회의(기재부 1차관 주재) 산하에 부처책임제 TF 설치 하고, 분야별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여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발표

(2) 대외이슈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탄력적 대응

① [대외이슈 대응]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및 예상이슈 사전준비

- 글로벌 공급망, 첨단기술 보호 등 경제·안보가 결합된 현안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(‘21.10월 출범)를 통해 선제적·체계적 대응
 - *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 장관급 회의체(경제·외교안보 관련 장관, NSC 상임위원 참석)
- 탄소국경세 도입논의 및 디지털세 제도 최종합의(‘21.10월) 등 국내경제 큰 영향이 예상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사전준비 철저
 - * (탄소국경세) 양자·다자협약 강화, NDC상향 이행계획 마련 등 탄소배출량 감축 가속화, (디지털세) 디지털세 제도 시행을 위한 다자협정 체결·비준 및 개정입법

② [공급망 밀착관리]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설치·운영

-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
 - * 기재부1차관(팀장) + 공급망 기획단 + 파트별(총괄, 품목 I·II, 대외) 실무작업반 구성
 - ①조기경보시스템(Early Warning System) 가동, ②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, ③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등 추진

③ [조기경보 시스템] 위기징후 조기파악 및 신속대응 체계 가동

-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% 이상이거나,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,000여개 품목 대상으로 조기경보 시스템(EWS) 운영 개시
 - * 품목별 소관부처 판단에 따라 공급망 점검 필요 품목을 추가 선정
- 재외공관·코트라* 등 중심으로 해외동향 점검 및 국내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산업·분야별 공급망 점검 체계도 가동
 - * (외교부) 공관별 경제안보 담당관 선정 (산업부) 해외무역관(코트라)-협회 유관기관 협조

④ [맞춤형 안정화] 핵심품목 맞춤형 수급안정화 대책 추진

- 경제안보 핵심품목*에 대해 비축확대, 수입선 다변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, R&D·시설자금·세제·금융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기반 확충
 - * 100여개 품목에 대해 1차 선정(안) 既마련 → 200개 목표로 추가 선정 추진
-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프로그램* 마련(수은)
 - * 글로벌 생산기지 확충, 중간재 확보, 필수 원자재 수입 등 GVC 안정화를 위한 「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」 신설(약 15조원 규모, 잠정) 추진

[3] 부동산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

① [부동산] 시장 안정세를 공고히 하고, **가격 하향 안정세 실현 총력**

-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되도록 주택공급 확대, 투기수요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을 '22년에도 일관되게 추진
- 대규모 주택공급 효과가 조기에 체감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**주요 공급단계**(후보지 발굴, 지구지정, 사전청약 등) **별도 공급속도 제고**
 - * ① 공공재개발·재건축·직접시행 후보지 신규·추가 발굴,
② 주민 2/3 동의 확보지역 중심으로 예정·본지구 순차 지정,
③ '21년의 1.5배 이상 물량으로 사전청약 추진 및 추가물량 지속 발굴('22년 6.8만호 이상)
- 11.19대책 관련 **'22년 당초 계획된 공급물량(3.9만호*)**은 최대한 조기에 확보하고, 공실임대 전세주택 등 **최소 5천호 이상 추가 확대**
 - * 공공전세 0.9만호, 신축 매입약정 2.3만호, 비주택 리모델링 0.7만호
- 전세시장 이중가격 완화를 위해 단기 전세주택 공급 확대, 신규·갱신계약 임차인에 대한 **임차료 부담 완화** 등 **안정화 방안** 추진
 - * 상생임대계약 체결시 직전대비 5%이내 임대료 인상한 상생임대인 실거주 1년 인정, 월세세액공제 한시 강화 등

② [가계부채] **증가율 관리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도 추진**

- **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** 등을 통해 '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~5%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
 - 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*,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강화** 등 既 발표한 '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' 차질없이 시행
 - * '22.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/'22.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에 차주단위 DSR 적용
 - **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(60→50%), 상호금융 비조합원 예대율 개선 등
- 총량관리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외* 인정 등 **보완 방안 병행**과 함께 **분할상환 확대**** 등 **질적 개선 노력도 지속**
 - *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시 실수요 대출(결혼, 장례, 수술 등)은 일시 예외 허용, 전세대출, 정책서민금융상품, 소액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시 제외 지속
 - ** '22년 분할상환 목표치를 '21년 52.6%에서 상향 조정('22년초 결정) 등
- **저리 자금공급**(정책서민금융·중금리대출) **확대**, **채무조정제도 및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** 등 **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부담 완화** 지원
 - *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(조원): ('19) 8.0 ('20) 8.9 ('21) 9.6<목표> **('22) 10조원대**
중금리대출 예상 공급규모(조원): ('20) 30 ('21) 32 **('22) 35**

5

미래변화 대비 구조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.

- ◇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·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 · 사회 구조전환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리경제의 재도약 기회로 삼겠습니다.

[1]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

① [이행체계] 2030 NDC*, 2050 탄소중립 세부 이행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

* NDC :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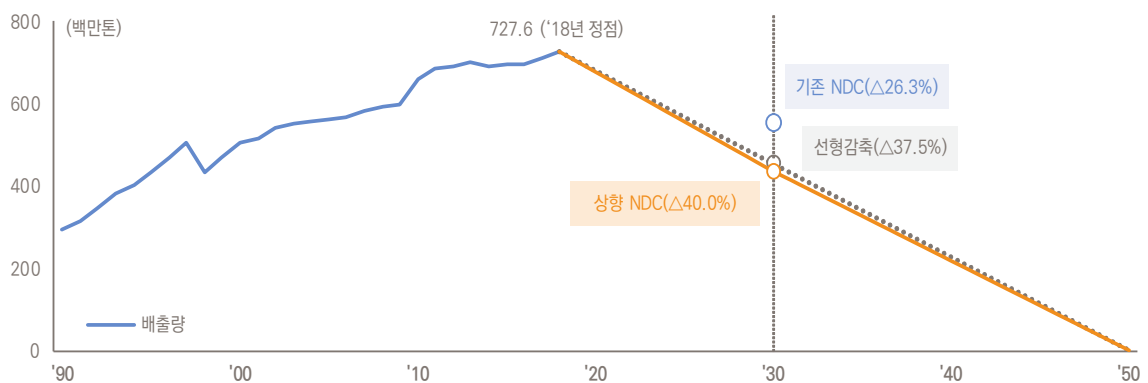
-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기후변화영향평가* 등을 포함한 시행령 제정(~'22.3), 에너지 · 수송 등 분야별 법정계획 변경 · 수립

*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후변화 영향 예측 등을 추가('22.9~)

- 부문별 ·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*(경로) 수준을 포함하는 「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」을 '22년 중 확정

* 「온실가스 감축 로드맵」은 배출허용총량 설정의 기준으로 작용

과거 배출경로 및 NDC



- 상향된 NDC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*을 추진하고,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실적을 재정 · 금융지원 등과 연계

* 감축목표 수정시 제3차('21~'25) 할당계획 변경,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장내 파생상품 도입 추진(~'25), 차기 · 추가 배출권 할당시 배출권 할당기업의 감축노력 반영 등

- 성과연동 재정사업(감축목표에 따라 후속사업 연계지원)을 시범 추진하고, 탄소중립기여업체를 우대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 신설 (신 · 기보, '22년 1조원)

② [이행지원]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 이행 지원 대폭 확대

- 탄소중립 이행 관련 예산을 '22년에 11.4조원 편성하고, 재정투자가 탄소저감에 미치는 효과 평가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
- 금년 '기후대응기금'(22년 2.4조원)을 신설, 복수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수행하던 사업들을 기금에서 총괄적으로 관리·운영
 - 배출권 매각수입(0.7조원), 교통세 수입(1.2조원) 등의 재원으로, 온실가스 감축, 공정한 전환 등 4대 핵심분야*에 집중 투자
- * (기금 지원 4대분야) ① 온실가스 감축(0.9조원), ②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(0.7조원), ③ 공정한 전환(0.2조원), ④ 제도·기반 구축(0.6조원)
-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강화, 녹색 분류체계(Taxonomy) 등을 통해 녹색분야 민간자금 유입 촉진, 세제·기술개발 적극 지원

③ [선제적 전환] 기업·노동자의 선제적 대응·전환 지원 적극 이행

-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대상에 탄소중립 등을 포함, 전략적 수요발굴 체계 구축 및 R&D·금융지원 확대 등 추진
 - 재정·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사업구조개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, 노동전환 시급성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 구축
 -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무전환·전직 준비 및 재취업 지원강화, 통합 컨설팅 전달체계 등 인프라 확충
- ⇒ '선제적 기업·노동전환 지원단' 등 관계부처 협의체 중심으로 추진현황 점검·보완 및 사업구조개편-노동전환 간 유기적 연계 추진

④ [국제협력] 다자협의체를 통한 탄소가격제 등 국제 논의 적극 참여

- * 다자협의체 : UNFCCC,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**, GCF 등
- ** 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: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2019년 4월 설립, 총 65개 국가 가입(한국 '21.4월 가입)
- 그린 EDCF의 확대('20년 2억불→'25년 6억불)와,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신규 공여* 등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대응 적극 지원
 - * (GGGI 신탁기금) 60억원 (P4G 사무국) 400만불 (UNFCCC 사무국) 10억원
- GCF 4기('22~'24년) 이사진 및 AF(UNFCCC 산하 개도국 지원펀드) 이사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관련 논의 주도

[2] 인구감소 · 지방소멸 대응

① [인구정책] 인구정책 TF 4대 핵심과제를 지속 추진

- * 정부는 저출산 · 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, 인구구조 변화 상황에 선제적 대처와 적응을 위해 '19년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TF 운영 중
- 1~3기 인구정책 TF 발표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(분기 1회)으로 점검하고, 3기 과제들은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본격 추진
- * 1~2기 TF 과제(총 326개: 1기 101개, 2기 225개) 전체에 대해 실적을 점검

제1~3기 인구TF 주요 추진과제

인구절벽 충격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여성 돌봄부담 완화 통한 경력단절 예방 ② 고령층 계속고용 활성화 ③ 외국인력 활용 관리체계 구축 ④ 평생교육·직업훈련 통합 플랫폼 구축 	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비대면 진료 발전방안 마련 ②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③ 국민연금·건강보험 운영 개선 ④ 고령친화산업 진흥위원회 구성·운영
축소사회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학 정원 유연화 등 대학 구조개혁 ② 군대 병력구조 재설계 ③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	지역소멸 선제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초광역권 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조성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③ 지역주도형 인구활력계획 수립

- '22년도에도 「4기 인구정책 TF」를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 · 보장 방안*을 집중 검토
- * 외국인력 활용체계 구축,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, 다양한 고용형태의 포괄적 보호체계, 평생교육·직업훈련 통합 플랫폼 연계 등
- 인구정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경인사연·KDI 등 중심으로 인구정책 연구단을 운영하고, 인구 관련 대응체계 개선 방안*을 다각도로 검토
- *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협업강화, 인구정책연구단과의 전략분석회의 정례화 등

구분	1기 TF	2기 TF	3기 TF
출범일	'19.4월	'20.1월	'21.2월
발표 대책	'19.9~11월 4개 전략 · 20개 과제	'20.8월 4개 전략 · 11개 과제	'21.7~12월 4개 전략 · 13개 과제
특징	인구정책 패러다임 제시 교육 · 국방 · 고용 · 재정 등 쏠분야 대책 마련	신규과제 발굴 및 1기과제 구체화 제4차 저출산 ·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적극 연계	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마련 사회분야 논의 강화 및 정책인프라 확충

② [균형발전]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,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

- 공간·산업·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해 초광역 협력 사업군을 선정·관리하는 등 예산 전주기 지원
- 지역균형 뉴딜 국비투자를 확대하고, 지역 대표사업 체감도 확산, 자생적 투자 생태계 조성 등으로 성과 확산 추진
 - * 국비규모: ('21) 10.8 → ('22) 13.1조원/ 5년간 국비규모: ('21) 42.6 → ('25) 62.2조원
-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* 중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4개 공정을 신규로 착공하고, 여타 사업도 사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
 - * 총 23개 사업 24.6조원 규모('21.7월)
- 153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된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'혁신도시 시즌2'('22년 예산 771억원)를 차질없이 추진

③ [재정분권] '22년 2단계 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지방재정제도 개선

- 현장밀착형 사업이양(2.3조원) 및 추가재원 이양(1조원 순확충)에 맞추어 지방소비세율 4.3%p('23년 4.2조원 규모) 인상('22년 2.7%p, '23년 1.6%p)
 - * 1단계 재정분권 포함시 지방소비세율 총 14.3%p 인상
→ 국세:지방세 비율 77.7:22.3('18) → 72.6:27.4('23, 전망)로 개선(+5.1%p)
-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투자 추진
- 자치구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 중심으로 복지사업 국고보조율을 맞춤형 조정(+0.2조원)
- 학령인구 감소 등 수요를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, 지방세 및 지방채 발행 관련 지자체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

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내용

구분	주요내용
시기 규모	'22년~'31년 10년, 연간 1조원 지원 (단 '22년은 0.75조원 지원)
내용	인구감소 지자체의 핵심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주재원 제공
배분	인구감소 등 취약지자체 중심(광역:기초 25:75)

국고보조율 맞춤지원사업 주요개선 방향

사업명	주요개선 방향	재원
기초연금	재정취약 기초지자체 맞춤형 지원 확대	+489 억원
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	소지역 보조율 2배	+342 억원
첫만남 이용권	영유아보육료 수준의 차등보조율 적용	+1,171 억원

[3]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과 재정관리체계 혁신

1 [지속가능성]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

- 금년은 재정준칙* 준수 취지를 감안하여, '22~'26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(9월)하고 조속히 법제화 되도록 추진
 - * 국가채무비율 60%와 통합재정수지 $\Delta 3\%$ 를 기준으로, 채무비율이 60%를 상회하면 통합수지 한도가 $\Delta 3\%$ 이내로 축소되도록 설계
- 인구·경제·산업 구조 변화를 감안한 전략적 자원배분, 저성과·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등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
- 연금·보험별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적정 보험료율 수준 및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

2 [성과관리] 재정사업 「성과목표관리」 기준을 프로그램으로 상향

- 성과평가·성과목표관리의 대상·방식·환류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(5개년)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
 - * 성과평가 제도 간 효과적 연계·체계화 방안 및 예산 환류 강화,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
- 프로그램 성과계획서·보고서의 거시적·전략적 기능 강화와 함께 예산 편성 프로세스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중점
 - * 성과미흡 세부사업 평가 및 연계 지출 구조조정 강화, 부처·분야별 성과지표 pool 개발 등

3 [차세대 D-Brain]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'22.1월 전면개통

- 現 디브레인('07년~)을 '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'으로 전면 재구축('19.12~'21년)*하여, 차세대 디브레인 서비스 개통('22.1.3~)
 - * ①재정업무·시스템 기능 혁신, ②AI기반 데이터분석 플랫폼(KODAS) 구축, ③데이터기반 정책상황관리시스템(KORAHs) 구축, ④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강화

4 [연기금투자플] 완전위탁형(OCIO) 기금관리체계 '22년 전면 도입

- 자산운용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중·소형 기금의 자산운용 주주기를 연기금투자플에 위탁하는 완전위탁형(OCIO) 도입
 - '21년 시범운영 후 관계법령 개정, 기금별 거버넌스 정비, 성과평가체계 수립 등 제도정비를 통해 '22년 전면도입* 예정
 - * 시범운영 참여기금(15개, 1.7조원) 포함 30개 기금(3.9조원) 참여 예정

[4] 국고관리 혁신

① [국유재산관리] 개발효과 제고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

-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대규모 유희 국유지 개발 과정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접목되도록 민간참여개발 활성화*
 - * ①민간이 개발 가능한 재산범위 확대 ②대부기간 확대(30→50년) ③민간과의 합작개발을 위한 공공출자 확대(자본금 30% 내에서 현금출자→50% 내에서 현물출자까지 허용) 등
- 등기부(대법원), 부동산공부(국토부) 등 주요장부와 국유재산 대장 간 자동연계 및 GIS 기능*을 갖춘 '차세대 국유재산시스템' 운영('22.1월)
 - * 지리정보시스템 : 인구, 입지여건 등 공간정보를 활용해 개발이 적합한 국유재산 후보지 분석
 - 국가의 핵심 정책수단인 국유재산을 공공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유희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및 개발효과 제고
- 불요불급한 특례 정비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('21.12월)에 따라 특례 존치평가 모형 개발 등 '타당성 평가제' 및 '일몰제' 도입

② [사회적가치]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

-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*
 - * 사용료율 감면(3→1%), 최장 6개월 납부유예, 연체이자율 감면(7~10%→5%) 등
- 청년,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노후 청·관사(16건), 대규모 유희 국유지(16건) 등을 개발하여 2.3만호의 공공주택 공급 추진

③ [혁신조달] 역대정부 최초로 도입한 '혁신조달' 확산

- 혁신제품 발굴·구매 확대*, 전문지원센터** 지정·운영 등 공공의 구매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
 - * 범부처·전문가 협의를 통해 혁신제품수 및 구매목표액 확대('22년초 설정)하고, 주기적 점검 실시
 - ** 정책연구, 혁신제품 지정·평가, 인큐베이팅¹⁾·스카우터²⁾, 해외진출 등 통합 지원
(1) 공공문제 발굴, 과제화, solution 탐색 등 지원 / 2) 전문가 그룹이 유망기업 혁신제품 발굴)
- ESG 도입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고, 산업정책·혁신지원 등 주요 국가정책과 조달정책간 연계 강화 적극 추진

(5) 공공기관 관리체계 혁신

① [경영평가] 상시적·전문적 경영평가로 전환하고 경영개선과 연계

- 공공기관연구센터를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·재편하고, 평가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('22.9월) 등 상시 평가관리를 강화
- 기관 생애주기 및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* 강화, 개별 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경영평가 및 성과급 산정시 반영 등

* 신설 기관 컨설팅, 실적부진기관 컨설팅, 구조적 문제기관 컨설팅 등

② [임금운영] 공공기관 직무급 확산을 가속화, 임피제 대상인력 감축 추진

- 직무급 우수사례 발굴, 기관별 실태점검 강화 및 애로사항 해소, 도입기관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직무급 확산 유도
- 기관별로 과도하게 확대운영중인 임금피크제 대상인력을 감축하는 한편, 업무재설계 및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

③ [재무관리] 장단기 재무상황 변동에 선제적 대응하는 맞춤형 재무관리 강화

- 금리인상,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하여, 우선 순위별 사업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재무안정성 지표를 적극 관리
- 인력조정, 경비절감 등 조직전반에 대한 효율화*도 병행

* 증원협의 강화, 정보공개 확대, 경영평가 강화 등 추진

④ [윤리안전경영] 윤리·안전경영 관련 제도 내실화와 가치 평가를 강화

- '윤리경영 표준모델'에 따라 기관별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유도
-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등급제 내실*있는 운영 및 후속조치 부처합동 이행점검, 경영진 안전교육 확대 등 실시

*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역량 강화 노력도 등 평가강화

IV. 2022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◆ 완전한 경제정상화

		'21	'22
① 성장 · 물가	경제성장률(%)	4.0	3.1
	소비자물가(%)	2.4*	2.2
② 취업 · 고용	취업자 증감(만명)	35	28
	고용률(15~64세, %)	66.5	66.9
③ 수출 · 수입	경상수지(억불)	910	800
	통관수출(억불)	6,430	6,560
	통관수입(억불)	6,125	6,280

* 현행 소비자물가(2015=100) 기준 전망치로

올해 12월 및 연간 실적(12.31일)은 기준년 개편후 신계열(2020=100) 기준으로 공표될 예정

◆ 혁신적 포용성장

① 혁신성장 성과 고도화

	'21	'22
한국판뉴딜 투자금액	27.1조원	33.1조원
BIG3 투자금액	4.4조원	6.3조원
K-스타트업 센터 확대	미국, 이스라엘, 인도, 스웨덴, 핀란드, 싱가포르, 프랑스	미국, 이스라엘, 인도, 스웨덴, 핀란드, 싱가포르, 프랑스, 인도네시아, 베트남
서비스산업 혁신TF	제2기 운영종료	제3기 TF 구성
혁신인재	11.3만명	15.8만명

② 포용적 성장기반 공고화

	'21	'22
고용보험 적용확대	특고 12개 직종	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 추가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	59만명	60만명
청년자산형성 패키지	-	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 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
일 · 가정양립 지원	-	영아수당 (월30만원) 도입 부부공동 유아휴직제 (3+3개월) 첫만남 이용권 (200만원)

◆ 구조전환 · 미래대비

		'21	'22
기후변화 대응	기후대응기금	(신규)	2.4조원 규모(신설)
	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	(신규)	시범운영 착수
재정운영 · 관리	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	(재구축)	전면 개통(1.3일)
	완전위탁형 기금관리체계	(신규)	전면도입
국고 · 공공기관	차세대 국유재산시스템	(신규)	운영(1월~)
	평가정보시스템	(신규)	구축 · 운영(9월)

붙임 1

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기타

국정과제	추진현황	향후계획
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	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대응, 한국판 뉴딜 추진, 안전관리 강화 등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증원 ○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* 착수(21.7월)→정리(21.12월)→발표(22.1월 잠정) ○ 안전등급제 심사결과 공개(21.8월, 98개 기관) 및 후속조치(21.9~12월) 실시 ○ 사회형평적 채용은 법적 의무고용비율을 모두 달성 * '20년말실적/의무고용비율(%): 장애인 3.46/3.4, 이전 지역인재 28.6/24, 청년 5.8/3, 여성관리자 26.4/25.4 ② 열린 공공기관, 찾아가는 서비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설 정보 등 혁신포털 콘텐츠 대폭 확대 집알리오앱 개발 등 시스템 전면 개편(21.11월) ○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(SOC+에너지+ICT) 출범(21.12월) ③ 공공기관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안 마련(21.8월) ○ 경사노위 논의 등 다각적 소통을 통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확대(공기업·준정부기관 기준 '19년말 5개 → '20년말 18개) ④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운영기관 지속 확대('20년 81개 → '21.9월말 118개) ○ 공공기관 감사 자격요건 강화 시행(21.1월) * 변호사, 회계사, 감사경력자 등 자격 신설 ⑤ 국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【 행안부 주관 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 도입 기관 확대('20년 46개 → '21.9월말 137개, +91개) 	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로드맵 지속 추진 ○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추진·시행 ○ 위험요소 보유 공공기관(100개)에 대한 안전등급제 심사결과 공개(22.5월) 및 후속조치, 경영평가 반영 ○ 청년·고졸장애인 채용 입사수기 공모(21.12월) 장애인 고용 컨설팅 확대(22년) ② 열린 공공기관, 찾아가는 서비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혁신포털(알리오플러스)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○ 공공기관 혁신·협업·시민참여 우수사례 지속 발굴 및 확산 ③ 공공기관 평가 및 보수체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추진 ○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 지속, 기관별 실태점검 강화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직무급 확산 유도 ④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동이사제 도입(공운법 개정)을 위한 입법 노력 지속 ○ 공공기관 감사 등 내부통제기능 활성화 지속 추진 ⑤ 국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【 행안부 주관 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 구축 지속 추진
19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	①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정개혁특위의 조세부문 권고안('19.2월) 주요 내용*을 조세정책에 지속 반영 * 공평과세 강화,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,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○ OECD/G20 디지털세 과세방안 최종안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측 입장 반영 노력 * '21.10월 최종 합의안 마련·추진 	①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·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「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」 수립 및 「세법개정안」 마련 ○ 디지털세 관련 세부논의 마무리 및 국내입법 과정 등에서도 국내 기업·전문가 등 의견 적극 수렴

국정과제	추진현황	향후계획
	② 과세형평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산소득·초고소득·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, 중산·서민층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'17~'21년 세법개정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①소득세·법인세 최고세율 인상, ②다주택자 종부세 추가과세, ③대기업 R&D비용 세액 공제 축소 등 비과세·감면 정비 등 	② 과세형평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1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완료('22.3) ○ 과세형평 제고 등을 위한 '22년 세법개정안 마련('22.7) 및 입법('22.12) 추진
	③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【 국세청 주관 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세자 친화적 세무조사 절차 개선 완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사전통지 기간 연장, 결과설명 강화 등 ④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신속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피해 최소화, 소비진작,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한 조특법·소득세법 등 개정('21.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'21년 소비증가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,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, 고용증대세제 개편 등 	③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【 국세청 주관 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납세자보호인력 외부개방 지속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세무서 외부개방 최종 목표 : '22년 30% ④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신속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장기화로 필요시 추가 세제·세정지원 방안 검토 및 신속한 입법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소비·투자를 통한 내수활성화, 중소기업·소상공인·근로취약계층 지원방안 등
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	① 경제시장 안정 대응시스템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가동, 재정투자, 뉴딜펀드 등으로 성과창출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한국판 뉴딜 2.0 및 1주년 성과발표('21.7),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(4월), 뉴딜 국민체험행사(7~9월) 등 새로운 방식 도입 ○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* 신속 집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업(28조원), 민자(17.3조원), 공공(64.8조원) ② 신성장·유망 서비스 시장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·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별 활성화 정책*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관광업계 코로나19 회복 지원방안('21.9),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 전략('21.11) ○ 한걸음모델 '21년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출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,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모두 합의 완료('21.11) ③ 영세 서비스 업종 경쟁력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상공인 폐업지원(20,223건), 취업지원(10,770건)을 통한 원활한 재기여건 마련 및 유망·특화업종으로 재창업지원(3,039건) ○ 영세서비스업의 경영·제조·서비스 혁신 지원을 위한 스마트상점(약 1.2만개) 및 공방(595개) 구축(10월말 기준) 	① 경제시장 안정 대응시스템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판 뉴딜 2.0에 따른 재정투자, 제도개선 등으로 성과창출 지속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재정투자(22년 33.1조원), 뉴딜 12대 입법과제(43개 법률), 뉴딜 펀드, 국민과 적극적 소통·홍보 등으로 성과창출 및 확산 ○ 투자 프로젝트* 확대(110→115조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업(33조원), 민자사업(15.5조원), 공공(67조원) ② 신성장·유망 서비스 시장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, 신기술 발전 등에 대응하여 문화·관광 등 유망서비스 지속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콘텐츠 산업 디지털 역량 강화, 방한 관광의 단계적 재개 등 ○ 한걸음 모델 개선 방안 마련('22.上.) ③ 영세 서비스 업종 경쟁력 향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세 서비스업의 '코로나 위기극복-폐업·재기-창업·성장'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실시 ○ 영세서비스업의 경영·제조·서비스 혁신 지원 및 결제수수료 부담 지속적 완화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스마트상점·공방 확충('22, 신규 5,000개사), 간편결제 가맹점 확대(~22년 160만개) 등

국정과제	추진현황	향후계획
	<p>④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비스산업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 전략* 마련('21.3) * 「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」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R&D 가이드라인 배포('21.3) <p>⑥ 소비진작대책 마련 및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수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비대책* 마련('21.6) * 상생소비지원금 신설, 지역사랑·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	<p>④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서비스 산업 혁신 TF(2기) 구성 및 운영('21.6~)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」 입법 추진 <p>⑥ 소비진작대책 마련 및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를 위한 '22년 경제정책방향 소비대책 마련
<p>26 사회적 경제 활성화</p>	<p>① 사회적경제 관련 법·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회대응(설명회 44회, 당정청 협의회 11회 소위원회 7회) 등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노력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(19회), 사회적경제 TF(21회) 등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 * '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'('21.5) 등 '21년 정책과제 4개 추가 발굴 <p>②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재양성·금융·창업지원 등 통해 사회적경제 초기 생태계 구축 판로지원 플랫폼(e-store 36.5+), 성장지원센터(15개) 등 인프라 구축 R&D·판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스케일업 지원 국민인식 확산을 위해 제3회 통합 박람회 개최, 바이소셜 캠페인 운영 <p>③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【 고용부 주관 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셜벤처, 환경, 문화서비스 등 진출 분야 다양화 정책 지속 추진 * 사회적경제 종사자:('17)253,031명→('20)313,577명, 연평균 5% 증 * 사회적기업취약계층 고용 확대(천명):('16) 23.8→('20) 33.1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지원 및 마을 관리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	<p>① 사회적경제 관련 법·제도 개선 및 추진체계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법) 사회적경제기본법, 사회적가치 기본법 등 주요 법률 제정 노력 (추진체계)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, 관계부처 TF 등 지속 운영 및 제도 개선 추진 <p>②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재양성·사회적 금융 지원 확대 등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지원 플랫폼 입점기업 확대, 사회적경제 지역 클러스터 구축 범부처 성장집중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스케일업 가속화 ESG경영 연계방안 마련, 통합박람회, 바이소셜 캠페인 지속 운영 <p>③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【 고용부 주관 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네트워크 형성사업,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지속 추진 자활기업, 여성가족형 사회적경제 기업 등 포용적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농촌 등 사회서비스 공급부족 지역에 대한 사업모델 개발 추진